여수, 호남 사고로 이주문제 급부상

산단 주변마을 이주문제 재부각 논란 ... 10월9일 주민 1000여명 시위

10월3일 발생한 전남 여수산업단지 호남석유화학의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3공장 폭발사고를 계기로 중단상태에 있던 여수산단 주변마을 이주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1996년 한국과학기술원이 수행한 여수산단 주변에 대한 환경오염실태 조사 용역 결과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결론이 나왔고, 이후 이주문제가 본격 대두돼 정부는 1999년 중흥, 월하 등 5개 마을 5956명의 주민을 이주시키기로 확정했으며, 이를 위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33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360억원의 입주기업 분담금 문제로 지지부진했고 2003년 초 남해화학 등 일부 기업의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의 가닥을 잡는 듯 했으나 5월 감사원이 “법률적 근거없는 입주기업 분담금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또다시 표류하게 됐다.

그러나 호남석유화학의 폭발사고는 정부와 주민이 평행선을 달리던 이주문제에 또다시 불을 지피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주민들은 폭발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 및 피해보상과 함께 여수산단 주변마을 이주문제를 즉각 마무리지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여수산단 주변의 인체 유해성분과 사고위험 때문에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주대책 분담금 문제를 마무리짓기는 커녕 주민들의 안전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입주기업들이 간신히 낸다고 한 분담금 문제가 감사원 결정으로 정말 어렵게 됐고, 시 입장에서 분담금 문제가 빨리 해결돼 이주사업이 원활히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10월9일 전남 여수시 삼일동 등 여수산단 주변마을 주민 1000여명은 호남석유화학과 여수시청 앞 등에서 공장 폭발사고 재발 방지와 주민 이주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여수산단에서 발생하는 대형 폭발사고와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정부에서 이주대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전라남도, 여수시 등은 이주사업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10월3일 발생한 호남석유화학의 폭발사고는 “분명한 인재”라며 공장설비 안전성에 대한 정밀진단을 즉각 실시하고 주민들의 이해없는 공장 신·증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Chemical Journal 2003/10/10>